



국가통합인증(KC)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합리화 등 규제개선 추진

- KC인증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으로 민간 참여 확대
- 제품안전 확보를 전제로 규제수준 조정·안전기준 정비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10월 17일(화) 14시, 엘에스일렉트릭(LS ELECTRIC)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는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지난 4월에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('23~'25)의 차질 없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, 간담회에서 △(인증기관 확대)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, △(규제수준 조정) 안전인증품목을 '25년까지 10% 축소, △(안전기준 정비) 유아·아동 모델 단순화 및 국제표준과 일치 등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·학·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
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KC인증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”면서, “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가 없도록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, 사고조사를 강화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 간담회 이후,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엘에스일렉트릭(LS ELECTRIC)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(RAPIEnet)*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, 라피넷 기술의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에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* 라피넷(RAPIEnet):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,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(LS ELECTRIC 자체 개발, '23 IR52 장영실상 수상)

담당 부서 <총괄>	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유천 (043-870-5410)
		담당자	연구관	김창용 (043-870-5419)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응로 (043-870-5440)
		담당자	연구관	기현중 (043-870-5441)
담당 부서	제품안전정책국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오재철 (043-870-5450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삼 (043-870-5574)



참고 1 간담회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제품에 대한 국민안전 확보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('23~'25)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
- 종합계획 중점 이행과제의 정비 방향에 대한 산·학·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

< 중점 이행과제 정비 방향 >

- ①(인증기관 확대)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(민간의 법정인증제도 참여 확대)
- ②(규제수준 조정) 안전인증 품목(現 45개)을 '25년까지 10% 축소
- ③(안전기준 정비) 유아·아동 모델 단순화, 국제표준과 일치 등

□ 간담회 개요

- 일시/장소: 10. 17.(화) 14시/LS ELECTRIC(경기도 안양 소재)
- 참석: KC인증 기업, 시험인증기관, 제품안전관리원 등

□ 프로그램(안)

일시	내용		비고
14:00~14:10	개회	▶ 개회 및 참석자 소개 ▶ 국표원장 모두발언	
14:10~14:20	발제	▶ 전기·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▶ KC인증 안전관리 수준 조정 · 안전기준 정비 방안	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14:20~15:00	토론	▶ 규제 합리화 방향 등 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
※ 간담회 이후, LS ELECTRIC 연구소 현장방문

▶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**① [인증기관 확대]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추진 (민간 참여 확대)**

-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비영리 지정요건 삭제 및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*

* 특수·고가 시험설비의 경우 외부 설비 보유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

- 영리 인증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부실인증 등 부작용 보완
- 안전확인신고시 9개 인증기관별 신고접수 절차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

* (안전확인시험기관) 제품시험 및 기술검토 → (관리원) 안전확인신고 수리 및 DB관리

② [규제수준 조정] 안전인증 품목(現 45개)을 '25년까지 10% 축소

- 전기·생활·어린이용품에 대해 제품 위해도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품목 규제 수준 정비

* 총 282개: (안전인증)45개, (안전확인)106개, (공급자적합성)107개, (안전기준준수)24개

- 위해도 평가와 함께 업계·학계·소비자 등의 의견 종합

③ [안전기준 정비]

- 유아·아동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
- 국제표준(IEC)과 부합화하여 「국제표준-KC」 일치화 → 중복시험 방지
- 불필요한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227종 폐지('23년)